

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얼마전에 광주 빛튜브에서 "대구시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광주란", "광주시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대구란" 주제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보았다. 양 도시 유튜브 공식 채널 '컬리풀대구TV'와 '빛튜브'에 공개되었는데, 각 연령대에서 느끼는 대구·광주의 이미지와 달빛고속철도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져 있다.

인터뷰형식으로 제작된 영상물에는 대구 2·28 민주화 운동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김광석 거리와 김정호 거리, 팔공산, 지역 감정, 대구근대골목, 안산선수, 유스퀘어 등 시민들이 자기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또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그동안 지역 간 교류가 적었지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자주 가겠다는 포부와 '달빛동맹',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다. 광주 시민 대구시민들은 2000년 달빛고속철도 완공으로 두 지역 간 교류도 많아지고 각자의 지역을 왕래하며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광주-대구달빛고속철도사업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다. 대구광역시 옛 명칭인 달구벌의 달자와 광주광역시 옛 명칭인 빛고을의 빛자를 따와서 유래되었다. 총 비용은 4조5천154억원이다. 경강선 원주역-강릉역 구간이 3조7천000억원이었으니 어마어마한 사업비이다. 지역 내 대도시로 이어지는 이 철도 건설시 노선에 역 위치

호남과 영남이 더 가까워지도록

만 제대로 선정되면 광주 생활권역인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는 광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며 대구 생활권역인 거창군, 고령군 역시 대구로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개량될 경전선과 함께 호남과 영남을 잇는, 남해고속도로와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철도관을 이루는 주축 노선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다.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특별법 최종안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사에 정지 3km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국도 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립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용자 ▷민간자본 유치 등이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를 통과한다. 영호남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16개 지자체가 특별법 최종안을 잘 조율하고 확고한 상생의지를 다지면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력이 더해진다면 순항할 것이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와 정부의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비(4조5천154억원) 부담, 경제성 부족 등을 부각했다.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의 질박함은 안중에 없는 근시안적 시각이다.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크게 남아있다. 특별법의 목표 달의 시점이 7월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와 관련,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고 법안 발의 뒤에도 정부 부처와 잘 조율해

가야 한다. 광주와 대구는 왜 달빛동맹을 맺었는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감정이라는 미명아래 동서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적으로 시간상 가까워지면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 서도 긴요한 사업이다.

최근에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추진에 영·호남, 여·야 정치권이 뜻을 같이한 가운데 노선 시·종점을 경북 포항과 전남 목포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해와 서해를 잇는 철도로서 상징성이 적잖은 것은 물론 두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범위를 경북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에서 출발해 포항을 경유하는 동해선까지 고려하면 달빛고속철도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목포와 광주, 서대구와 포항은 각각 66.8km, 101.9km 길이의 철도가 이미 놓여 있어 기존 노선을 이용하면 추가 건설비도 들지 않는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약 1천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차량구입비를 추가하면 목포와 포항을 잇는 총 367.5km 길이의 동해·서해 횡단노선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분석이다. 시속 100km로 열차가 달린다고 가정하면 중간 정차를 고려하더라도 시·종점까지 4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

광주와 대구 내륙이 연결돼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시·종점을 포항과 목포로 연장해 진정한 영·호남 화합을 끌어내는 것은 물론 교류 확대되는 날이 곧 오길 바란다.

동해와 서해 양 끝이 연결되면 호남문화와 영남문화가 잘 섞이고 어우러져 대한민국 국의 신활력이 될 것이다. 영·호남 정치인들은 사활을 걸고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집중해야 한다.

社說

광주 곳곳 난립하는 현수막들 '정치 공해' 아닌가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을 벌여 모두 2만5천570건을 철거했다. 불과 10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심각성을 더한다. 주민들은 도심 곳곳에 내걸려 시야를 가로 막는 정치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알리는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19곳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냈다.

정치 현수막 난립은 정당 명칭 및 연락처, 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 등을 표기하고 준수하면 어떤 제약도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다툼 속에서 현수막을 각자의 입장이나 당위성을 홍보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대 정당이 아닌 이상 소수 정당의 경우도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상업, 정치를 막론하고 불법 현수막은 최대한 정비하는 게 마다. 운전자의 시선을 가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줄에 발이 걸려 넘어

지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게 간판을 침범해 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단속이 어렵다. 광주시가 횡단 보도나 버스 정류장 30m 이내, 우회전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게시를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길거리를 걷다 만나는 정치 현수막의 자극적이고 비방적인 구조, 문구도 짜증을 유발한다. 소위 '목 좋은 자리'에 한 쪽이 걸면 따라 가는 식의 경쟁하는 실정이다. '합법'이라고 하니,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자치구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아 공해'는 점점 심각하다. '정치 공해'로 규정해야 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수막은 우후죽순처럼 거리를 점령할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명백한 특혜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천혜의 자연 활용 골프 중심지 준비하는 전남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2022년 기준 514개소에 달한다. 전남은 39곳이다. 골프산업 시장 규모는 2016년 14조, 2018년 15조, 2021년 17조, 2022년 22조 원(추정)으로 급격한 성장세다. 골프인구는 MZ세대, 여성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5년 26만7천, 2017년 306만, 2021년 474만명으로 조사됐으며, 2026년 600만 돌파가 예상된다.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수립, 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절차 개선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상생 방안 마련, 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전남은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산림 비율이 56.6%로 타 지역(전국 평균 62.7%)에 비해 낮아 골프장에 알맞은 입지조건을 갖췄다. 현재 13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4곳은 투자자가 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매입을 진행 중

이다. 9곳은 도 및 시군에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투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허가 단축보다 우선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통해 상생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 아울러 관심이 높아진 환경 훼손에 대한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분별한 벌목 문제 등으로 다름이 잦은 상황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치밀하게 맞춤형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수려한 경관과 한겨울을 온화한 날씨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골프 중심지로 도약함으로써 내수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각종 전시회 및 대회를 유치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다. 전남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청년칼럼



백준희  
에듀테인먼트 퍼니 대표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때

례를 입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 및 사회현장에서는 청년고립의 고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청년들의 고립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 팬데믹 기간에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자립감을 낮추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냈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20만 여명의 은둔형외톨이 청년이 증가했다. 이 또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악화되면서 좌절감, 멸시, 무기력, 우울증에 까지 다다른 상황은 청년을 고립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심각한 어려움이라는 점이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고립기간은 1-4년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5-9년, 10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립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박탈감과 증오, 불안정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작년엔 문을 열어 많은 청년들이 개인상담, 생활개선프로그램, 가족상담, 관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면서 지역 청년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은둔형외톨이에 관한 지원사업 및 통계조차도 조사는 커녕 시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고립되는 청년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후, 관련된 사업을 편성 및 예산을 투입,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사회 안전망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과 협업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은 세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 새롭게 적응하려고 하고 있다. 과정 속에 청년들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미래를 꿈꾸기 보다는 하루를 버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사회문제도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고, 이에 따른 좌절감으로 인해 인간관계, 금전적인 한계에 봉착하면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항공 중에 비상구 출입문 사건도 30대 청년이 "실직으로 인해 답답함에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아파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재 청년을 위해 하루 빨리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재를 파악해 더 이상 청년들이 아프지 않도록 보살필 수 있는 국가가 돼야만 어려운 사회 환경속에 청년들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최근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16일에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다.

특권폐지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특권을 헌법에 의해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개정(물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확정)을 통해서 법과 제도로 보장된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자기법통'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특권폐지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내년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해이다.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되었다는 정치인과 재선, 삼선 등을 노리는 현 국회의원들을 깨어있는 국민들이 압박해야 한다.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당에서 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국민들이 나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서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진

정한 '특권폐지운동'이다. 대규모 시민운동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 특권조항이 사라진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내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특권폐지운동'은 결코 가진 자를 위한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담론을 담아 내고 행복한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회 실천운동이며 이 시대의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임함철·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공동대표)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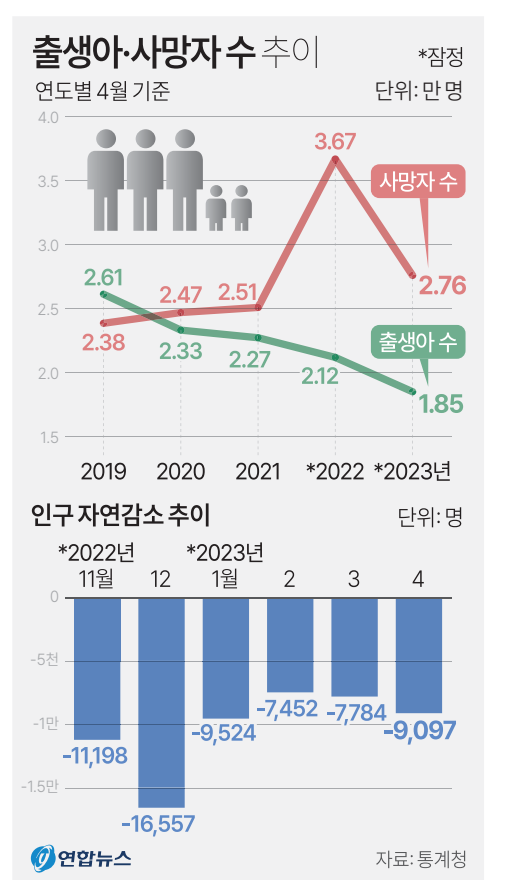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4월 출생아 수 2만명 밑으로...인구 42개월째 자연 감소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최초로 2만명을 밑돌면서 인구 4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4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줄며 9개월만에 감소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천484명으로 1년 전보다 2천881명(12.7%)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4월에 2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월간 통계 작성시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9개월째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사망자 수는 2만7천881명으로 1년 전보다 9천91명(24.8%) 감소했다. 작년 4월 코로나19로 사망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으면서 4월 인구는 9천97명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2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 중이다. 혼인 건수는 1만4천475건으로 1년 전보다 1천320건(8.4%)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이후 4월 기준 역대 가장 적은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2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